

외국인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과 규정요인 분석*

2000~2008년 일본판 종합사회조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김범수

1. 서론

1980년대 후반 이래 일본 거주 외국인 숫자는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일본 법무성 자료에 의하면 일본 거주 등록 외국인 숫자는 1990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5년 200만 명을 넘어섰

김범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민주주의, 민족주의, 다문화주의, 인권, 정의 등 현대정치이론의 주요 이슈와 일본의 소수자 인권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Bringing Class Back In: The Changing Basis of Inequality and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31 No. 5, 2008), 「국민의 경계 설정: 전후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1호, 2009), 『인권의 정치사상: 현대 인권 담론의 쟁점과 전망』(이학사, 2010, 공저) 등이 있다.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2011년도 일본학 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본판 종합사회조사 자료는 오사카상업대학 JGSS연구센터가 도쿄대학사회과학연구소의 협력을 받아 시행한 연구 프로젝트 자료임을 밝혀둔다[日本版 General Social Surveys(JGSS)は大阪商業大学 JGSS 研究センター(文部科学大臣認定日本版総合的社会調査共同研究拠点)が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の協力を受けて実施している研究プロジェクトである. The Japanese

고 2008년 221만 7426명까지 증가했다 최근 약간 감소하여 2011년 말 현재 일본 전체 인구의 약 1.63%에 해당하는 207만 8480명의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¹ 이러한 외국인 증가 추세는 일본 사회의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앞으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문제와 노령자 개호(介護)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사회의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노동력 부족을 근거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가져올 부정적 측면,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 문제나 사회보장 비용 증가 문제, 문화적 동질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 사회에 가져올 문화적 갈등 발생 가능성, 경제 위기 시 실업자 증가 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일본인들의 견해는 아직 부정적 견해가 우세한 편이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정적 견해가 우세한 것은 아니다.

실례로 일본 내각 관방장관실에서 1990년, 2000년, 2004년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관련하여 일본 전국 성인 남녀 5000명, 3000명, 3000명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단순 노동자 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정부 정책에 대해 앞으로도 “단순노동자 취업을 인정하

General Social Surveys(JGSS) are designed and carried out by the JGSS Research Center at Osaka University of Commerce(Joint Usage/Research Center for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s accredited by Minister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in collaboration with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Tokyo.].

1 일본 거주 등록 외국인 통계는 法務省入国管理局, 「平成22年末現在における外国人登録者統計について」, 東京: 法務省, 2011 참고.

지 않는 현재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한(2004년 조사의 경우 “앞으로도 전문적 기술, 기능, 지식을 지닌 외국인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단순노동자 유입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1990년 14.1%, 2000년 21.2%, 2004년 25.9%로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특별한 조건 없이 일본인과 동일하게 취업을 인정해야”라고 대답한(2004년의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단순 노동자를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 또한 각각 14.9%, 16.3%, 16.7%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단순노동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고 취업을 인정해야 한다”고 대답한(2004년의 경우 “여성이나 고령자 등 국내 노동력 활용을 우선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 한해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은 1990년 56.5%, 2000년 51.4%, 2004년 39.0%로 약간 감소 추세에 있다.² 또한 이 연구가 분석 자료로 사용할 오사카상업대학 비교지역연구소가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00년부터 실시해온 ‘일본관 종합사회조사(日本版 総合社会調査;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이하 JGSS로 약칭)’ 2000~2008년 결과에 의하면 “귀하가 생활하는 지역에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와 반대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30~40%, 50~60% 선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³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년간 일본 사회 내에서 외국인

2 일본 내각부 관방장관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 『外国人労働者問題に関する世論調査: 平成2年11月調査』, 東京: 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 1992; 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 『外国人労働者問題に関する世論調査: 平成12年11月調査』, 東京: 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 2001; 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 『外国人労働者の受入れに関する世論調査: 平成16年5月調査』, 東京: 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 2004 참고.

3 일본관 종합사회조사(JGSS)는 오사카상업대학 비교지역연구소가 2000년부터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미국의 국립여론조사센터(NORC)가 197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종합사회조사(GSS: General Social Survey)’를 모델로 일본인의 의식과 행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는 조사다. 현재까지 2회의 예비조사와 8회의 본 조사(JGSS-2000, 2001, 2002, 2003, 2005, 2006, 2008, 2010)가 실시되었으며 앞으로도 2년에 1회씩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시계열적 분석을 위한 계속 설문과 시사 문제에 대한 시사 설문, 공모 설문, 국제 비교를 위한 동아시아사회조사(EASS: East Asian Social Survey)와의 공통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자의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세대 구성, 가족 관계, 생활 습관, 기본적 생활의식, 정치의식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2003년부터 조사표를 A표와 B표 두 종류로 나누어 A표는 계속 설문과 시사 설문을, 그리고 B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이 하나로 수렴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한다.

이처럼 외국인 증가에 대한 여론이 양분된 상황에서 이 논문은 외국인 증가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찬성과 반대는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인구통계학적(즉 연령, 성별), 사회·정치·경제적(거주지 도시규모, 생활정도, 세대수입 정도, 정치의식 등) 특성 차이는 무엇인지,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와 인구통계학적, 사회·정치·경제적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인과의 접촉 빈도, 외국어 능력, 지역에 대한 애착 정도 등은 외국인 증가에 대한 견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오사카 상업대학 비교지역연구소가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일본 거주 만 20세 이상 89세 이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실시해온 JGSS자료 가운데 현재 2차 분석을 위해 공개된 2000~2008년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⁴

주지하듯이 일본의 외국인 문제에 대한 기존 국내 학계 논의는 참정

표는 공모 설문과 EASS 공모 설문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08년 조사의 경우 2008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89세 이하 성인 남녀 8000명(A표 3997명; B표 400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중 2060명의 A표와 2160명의 B표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A표, B표 각각 58.2%와 60.6%를 기록했다. 표본 추출은 전국을 우선 6블록으로 나누고 이어 시군 규모에 따라 이를 다시 4단계(2006년 이전 조사는 3단계)로 나눈 뒤 인구비례에 따라 526 지점을 추출한 후 각 지점마다 선거인 명부를 기준으로 등간추출법을 통해 14~16명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JGSS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大阪商業大学比較地域研究所·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日本版 General Social Surveys 基礎集計表·コードブック JGSS 累積データ 2000-2003』, 大阪: 大阪商業大学比較地域研究所, 2006; 『日本版 General Social Surveys 基礎集計表·コードブック JGSS-2005』, 大阪: 大阪商業大学比較地域研究所, 2007; 『日本版 General Social Surveys 基礎集計表·コードブック JGSS-2006』, 大阪: 大阪商業大学比較地域研究所, 2008; 大阪商業大学JGSS研究センター, 『日本版 General Social Surveys 基礎集計表·コードブック JGSS-2008』, 大阪: 大阪商業大学JGSS研究センター, 2010 등을 참고.

- 4 본 논문의 심사자 한 분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연구는 JGSS 2000~2008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사회에 나타난 외국인 정책상의 변화와 외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의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심사자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추후 JGSS 2010년 결과와 2012년 결과가 공개된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혀둔다. 지적해 주신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권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거나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외국인 문제의 다양한 측면과 이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외국인 정책 변화를 소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⁵ 이들 연구는 일본의 외국인 문제 전반을 소개하고 일본 정부가 외국인 문제에 직면하여 어떠한 정책을 채택하고 추진해 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나 일본인들이 외국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일본의 외국인 문제에 대한 외국 학계의 연구들도 대부분의 경우 일본의 외국인 문제 전반과 일본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일본인들이 외국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⁶ 이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사정을 감안하여 JGSS 자료

- 5 일본의 외국인 참정권 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이시재, 「일본의 외국인 지방자치 참가 문제의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1호, 2003; 최우용, 「외국인의 참정권에 관한 연구: 재일동포 참정권의 문제와 일본의 학설을 소재로 하여」, 『공법학연구』 제4권 제2호, 2003; 서보진, 「일본에서 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논의」, 『공법연구』 제30집 제5호, 2002; 이기완, 「전후 일본과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헌법 해석과 정치과정 중심적으로」, 『민족연구』 제7권, 2001 등을 참고. 또한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설동훈,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비교」, 『일본연구논총』 제21집, 2005; 김태영, 「일본의 국제화와 동아시아의 노동시장: 일본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32집, 2006 등을 참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다양한 외국인 정책에 관해 소개하는 국내 연구로는 엄기욱, 「일본 거주 외국인 영주자의 사회복지 수급권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29권 제1호, 2009; 이원경, 「일본의 외국인정책 변화와 '다문화공생정책」, 『지역사회연구』 제18권 제4호, 2010; 이유진, 「일본의 외국인 재류관리 제도과 지원책에 대한 연구: 2000년대 후반의 시책과 제도개정을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31권, 2010; 최병두,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사회공간적 전환과정과 다문화공생 정책의 한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7권 제1호, 2011; 한승미, 「일본의 '내향적 국제화'와 다문화주의의 실험」, 『한국문화인류학』 제36권 제1호, 2003; 이시재, 「일본 가와사키 시의 '내부국제화' 정책연구: '공무원임용자격에 있어서 국적조항' 철폐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제36권 제6호, 2002 등을 참고.
- 6 일본의 외국인 문제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외국의 주요 연구로는 Hiroshi Komai, *Migrant Workers in Japan*, London: K. Paul, 1995; Hiromi Mori, "Foreign Migrant Workers in Japan: Trends and Policies",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APMJ*, Vol. 4 No. 2-3, 1997; Mike Douglass & Glenda Roberts eds., *Japan and Global Migration: Foreign Workers and the Advent of a Multicultural Society*, New York: Routledge, 2000; Yoko Sellek, *Migrant Labour in Japan*, New York: Palgrave, 2001; Apichai Shipper, "Criminals or Victims? The Politics of Illegal Foreigners in Jap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31 No. 2, 2005; Myron Weiner & Tadashi Hanami, *Temporary Workers or Future Citize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8; 島上清明・川口晶, 『外国人材受入問題に関する日本経団連の考え方』, 東京: 日本経済調査協議会, 2008; 高宅茂著, 『入国管理の現状と課題』, 東京: 日本経済調査協議会, 2008; 井口泰, 『動き出した外国人政策の改革と外国人雇用の課題』, 東京: 日本経済調査協議会, 2008; 丹野清人, 『日系人から学ぶ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の教訓』, 東京: 日本経済調査協議会, 2008; 宮島喬・梶田孝道, 『外国人労働者から市民へ: 地域社会の視点と課題から』, 東京: 有斐閣, 1996; 手塚

분석을 통해 일본인들이 외국인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사회·정치·경제적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⁷

이를 위해 우선 2절에서는 현재 일본 거주 외국인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본에서 외국인 문제가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일본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3절에서는 JGSS 2000~2008년 자료 분석을 통해 외국인 증가에 대한 일본인들의 찬반 추이는 어떠한지,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인구통계학적, 사회·정치·경제적 특성 차이는 무엇인지,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와 인구통계학적, 사회·정치·경제적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인과의 접촉 빈도, 외국어 능력, 지역에 대한 애착 정도 등은 외국인 증가에 대한 견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한 후 이 연구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 연구는 최근 일본 사회에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더불어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和彰, 『外国人労働者研究』, 東京: 信山社出版, 2004 등을 참고.

- 7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실례로 田辺俊介, 「外国人への排他性と接触経験」, 『社会学論考』 第22号, 2001; 大槻茂実, 「外国人接触と外国人意識—JGSS-2003データによる接触仮説の再検討」, 大阪商業大学比較地域研究所·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編, 『日本版 General Social Surveys 研究論文集 [5] JGSS で見た日本人の意識と行動』, 2006; 福田友子, 「外国人との接触経験と『地域の国際化』」, 玉野和志(研究代表者), 『都市の構造転換とコミュニティの変容に関する実証的研究 平成15年度~平成17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 研究成果報告書』, 2007; 中澤渉, 「在日外国人の多寡と外国人に対する偏見との関係」, 『ソシオロジ』 第52巻 第2号, 2007 등의 연구는 JGSS 자료 분석을 통해 외국인 증가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규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들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새롭게 공개된 2008년 JGSS 자료를 중심으로 외국인 문제에 대한 최근 변화 추이와 규정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의 외국인 문제

1980년대 후반 외국인 노동자 유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 이전까지 일본에서 외국인 문제라 함은 기본적으로 일제시기 일본으로 이주하거나 또는 강제로 징용된 조선인들과 그들의 후손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 계속 남아있던 '재일한국조선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와 동일시되었다.⁸ 이는 기본적으로 1980년대 초반까지 이들 재일한국조선인이 일본 내 외국인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47년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외국인 등록제를 실시했을 당시 재일한국조선인은 등록 외국인의 93.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그 외 대부분의 등록 외국인은 대만 출신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 비율은 1970년대까지 85%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비율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함께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여 1994년 처음으로 50%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고 현재는 2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⁹ 대신 중국, 브라질, 필리핀, 페루 등지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는

8 1945년 8월 일제 패망 당시 약 200만 명의 '조선인'들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일제시기 일자리를 찾아 또는 강제 징용되어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로 8.15 해방과 함께 '고향'으로 되돌아왔으나, 약 50만 명의 '조선인'들, 특히 강제 징용이 시작되기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하여 가족과 함께 일본에 정착한 '조선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당분간 일본에 계속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당시 이들은 자신들의 일본 체류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조만간 조선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일본 외무성 자료에 의하면 1946년 3월 외국인 등록제 시행과 함께 외국인으로 등록한 64만 7006명의 조선인 가운데 약 79.5%에 해당하는 51만 4060명의 조선인들이 조선으로의 귀국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8년 남북분단과 뒤이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고향'으로 귀국하지 못한 채 일본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다. 일제 패망 후 일본 거주 조선인의 상황에 관해서는 Bumsoo Kim, "Bringing Class Back In: The Changing Basis of Inequality and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31 No. 5, 2008, p. 876 참고. 이처럼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계속 남아있던 '조선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 논문에서는 '재일한국조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들과 달리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으로 이주한 한국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뉴커머(newcomer) 재일한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9 일본 거주 외국인 가운데 재일한국조선인의 비율에 관해서는 Bumsoo Kim, "From Exclusion to Inclusion? The Legal Treatment of 'Foreigners' in Contemporary Japan", *Immigrants and Minorities*, Vol. 24 No. 1, p. 53 참고.

중국인이 처음으로 재일한국조선인을 제치고 일본 내 최대 외국인 집단이 되었다.

〈표 1〉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거주 등록 외국인의 국적별 추이를 보여준다. 이 표에 의하면 2011년 말 현재 일본 거주 등록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재일한국조선인이 26.2%, 브라질인과 필리핀인이 각각 10.1%를 차지하고 있다. 〈표 1〉은 또한 지난 10년간 일본에 거주하는 등록 중국인 숫자가 꾸준히 늘어난 반면 한국 국적 또는 ‘조선적(朝鮮籍)’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⁰ 한편 〈표 2〉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거주 등록 외국인의 재류자격별 추이를 보여준다. 이 표에 의하면 특별영주자 수가 지난 수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영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일한국조선인 숫자가 지난 수년간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이다.¹¹ 재일한국조선인 특별영주자 수는 1999년만 하더라도

10 일본 거주 외국인들에게 자신의 거주지와 국적(또는 출신지) 등을 일본 지방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외국인 등록제도가 1947년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국적을 ‘조선’이라고 명기하여 외국인 등록을 실시했다. 그러나 1948년 남한과 북한에 공식적으로 정부가 수립된 이후 남한을 지지하는 ‘조선인’들은 일본 정부에 외국인 등록증 상에서 자신들의 국적을 ‘조선’에서 ‘한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북한을 지지하는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국적을 계속 ‘조선’으로 유지하기를 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50년 남한을 지지하는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국적을 ‘조선’에서 ‘한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적 변경은 당시 남북한과 일본 사이에 공식적 외교관계가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는 없었으며 단지 상징적 의미만을 갖고 있었을 뿐이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해 한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에서야 ‘한국’ 국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실시한 사람들을 한국 국적자로 공식 인정하기 시작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조선인 가운데 대부분은 한국 국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재일한국조선인들이 외국인 등록 서류의 국적 또는 출신지 기입란에 ‘조선’을 명기하여 외국인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 서류에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 ‘재일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실제 의도와 상관없이 일본 내에서 법적으로는 사실상 북한 국민으로 대우받고 있다. 북한 또한 이들을 북한 국민으로 대우하여 북한 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조선인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이 북한을 지지하기 때문에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한반도의 분단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 국민으로 대우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 또한 공식적으로는 조선적이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국인 등록상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범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Neither South, North, Nor Japan: Korean Resident Writers Mull Allegiance”, *Japan Times*, 27 December 2002; “Japan’s Enemy Within: The Shrinking North Korean Community Feels It Is under Siege”, *Japan Times*, 25 January 2005 참고.

11 일본 정부는 1991년 5월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재일한국조선인들의 법적 지위를 안정화하기 위해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별법(日本国との

〈표 1〉 국적(출신지)별 외국인 등록자 수 추이

(2001-2011)*

국적 (출신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중국 (%)**	381,225 (21.4)	424,282 (22.9)	462,396 (24.1)	487,570 (24.7)	519,561 (25.8)	560,741 (26.9)	606,889 (28.2)	655,377 (29.6)	680,518 (31.1)	687,156 (32.2)	674,871 (32.5)
한국·조선 (%)**	632,405 (35.6)	625,422 (33.8)	613,791 (32.1)	607,419 (30.8)	598,687 (29.8)	598,219 (28.7)	593,489 (27.6)	589,239 (26.6)	578,495 (26.5)	565,989 (26.5)	545,397 (26.2)
브라질 (%)**	265,962 (15.0)	268,332 (14.5)	274,700 (14.3)	286,557 (14.5)	302,080 (15.0)	312,979 (15.0)	316,967 (14.7)	312,582 (14.1)	267,456 (12.2)	230,552 (10.8)	210,032 (10.1)
필리핀 (%)**	156,667 (8.8)	169,359 (9.1)	185,237 (9.7)	199,394 (10.1)	187,261 (9.3)	193,488 (9.3)	202,592 (9.4)	210,617 (9.5)	211,716 (9.7)	210,181 (9.8)	209,373 (10.1)
페루 (%)**	50,052 (2.8)	51,772 (2.8)	53,649 (2.8)	55,750 (2.8)	57,728 (2.9)	58,721 (2.8)	59,696 (2.8)	59,723 (2.7)	57,464 (2.6)	54,636 (2.6)	52,842 (2.5)
미국 (%)**	46,244 (2.6)	47,970 (2.6)	47,836 (2.5)	48,844 (2.5)	49,390 (2.5)	51,321 (2.5)	51,851 (2.4)	52,683 (2.4)	52,149 (2.4)	50,667 (2.4)	49,815 (2.4)
기타 (%)**	245,907 (13.8)	264,621 (14.3)	277,421 (14.5)	288,213 (14.6)	296,848 (14.8)	309,450 (14.8)	321,489 (14.9)	337,205 (15.2)	338,323 (15.5)	334,970 (15.7)	336,150 (16.2)
총수	1,778,462	1,851,758	1,915,030	1,973,747	2,011,555	2,084,919	2,152,973	2,217,426	2,186,121	2,134,151	2,078,480

* 각 연말 현재 외국인 등록자 수.

** 괄호 안 숫자는 전체 등록 외국인 가운데 차지하는 구성비.

출처: 法務省入国管理局, 2011, 2012.

〈표 2〉 재류자격별 외국인 등록자 수 추이

(2006-2011)*

재류자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구성비)
총수		2,084,919	2,152,973	2,217,426	2,186,121	2,134,151	2,078,480	(100.0)
영주자	일반영주자	394,477	439,757	492,056	533,472	565,089	598,436	(28.8)
	특별영주자	443,044	430,229	420,305	409,565	399,106	389,083	(18.7)
	소계	837,521	869,986	912,361	943,037	964,195	987,519	(47.5)
비영주자	유학	168,510	170,590	179,827	192,668	201,511	188,604	(9.1)
	일본인의 배우자 등	260,955	256,980	245,497	221,923	196,248	181,616	(8.7)
	정주자	268,836	268,604	258,498	221,771	194,602	177,981	(8.6)
	가족체재	91,344	98,167	107,641	115,081	118,865	141,994	(6.8)
	인문지식·국제업무	57,323	61,763	67,291	69,395	68,467	119,358	(5.7)
	기술	35,135	44,684	52,273	50,493	46,592	67,854	(3.3)
	기능	17,869	21,261	25,863	29,030	30,142	42,634	(2.1)
	영주자의 배우자 등	12,897	15,365	17,839	19,570	20,251	31,751	(1.5)
	기업내 전근	14,014	16,111	17,798	16,786	16,140	21,646	(1.0)
	투자·경영	7,342	7,916	8,895	9,840	10,908	14,636	(0.7)
	교육	9,511	9,832	10,070	10,129	10,012	11,778	(0.6)
	연수	70,519	88,086	86,826	65,209	9,343	10,106	(0.5)
	홍행	21,062	15,728	13,031	10,966	9,247	3,388	(0.2)
	기타	212,081	207,900	213,716	210,223	237,628	77,615	(3.7)
	소계	1,247,398	1,282,987	1,305,065	1,243,084	1,169,956	1,090,961	(52.5)

* 각 연말 현재 외국인 등록자 수.

출처: 法務省入国管理局, 2011, 2012.

51만 7787명에 이르렀으나 2004년에는 46만 1460명 선으로 줄어들었고 2010년에는 39만 5234명으로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¹²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 30년 안에 일제시기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후손인 재일한국조선인 특별영주자 숫자는 1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1980년대 후반 이후 재일한국조선인 숫자는 꾸준히 줄어든 반면 여타 외국인 거주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일본 내에서 ‘외국인 문제’라 함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본으로 이주한 이들 ‘뉴커머(newcomer)’ 외국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 특히 20세기 초·중반 남미로 이주한 일본인들의 후손 가운데 1989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후 일본으로 귀환한 일본계 브라질인과 페루인 등 소위 ‘닛케이진(日系人)’과 산업연수생제도와 관광 비자 등을 통해 일본에 입국한 이후 불법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본에서 외국인 문제가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적 맥락 속에서 간단히 살펴보자.

주지하듯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일본 정부는 일본 사회의 문화적·인종적 단일성을 유지하고자 외국인 이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버블경제가 한창이던 1988년 구인자수가 구직자 수를 넘어서게 되고, 이와 더불어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소위 ‘3D’ 업종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자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계를 중심으로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기존 이민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12 法務省入国管理局, 『平成16年外国人登録者統計』, 東京: 法務省, 2005; 法務省入国管理局, 『平成22年末現在における外国人登録者統計について』, 東京: 法務省, 2011 참고.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이러한 재검토를 통해 일본 정부는 1988년 6월 제6차 고용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소위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각국의 경험이나 노동시장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 될 수 있는 한 신중히 대처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단순노동자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전문적·기술적 노동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을 확립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별도로 일본 정부는 일본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1989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본계 남아메리카인들(주로 브라질인들과 페루인들)이 정주자라는 지위로 입국하여 직종 제한 없이 일본 내에서 취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중국인 및 동남아시아인들도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제조업, 건설업 분야 3D 업종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단순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¹³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고령화와 저출산이 계속되고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경제계,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일본 인구가 실제로 감소하기 시작하자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2004년 4월 14일 발표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관한 제언’에서 “일본의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여성 및 고령자의 힘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취업환경, 노동환경을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대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나 농림수산업에서는 앞으로 일본인만으로는 (노동력) 공급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단련은 또한 2008년 10월에도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형 이민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

13 안천, 「일본의 이민정책과 일본 거주 외국인의 현황」, 『민족연구』 제48권, 2011, 63쪽.

다. 이러한 경제계의 요구에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 문제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신중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연수생 제도 등을 통해 일정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허용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내에서는 최근까지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 문제를 두고 반대파와 지지파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아사토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첫째, 잉여노동력이 존재하는 아시아 각국의 노동자를 노동력이 부족한 일본이 받아들이는 것은 경제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부합하며 둘째, 노동력 부족이 심해지면 생산 공장 자체의 해외 이전을 초래해 국내 산업이 공동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해외 노동력 조달은 오히려 국내 고용 기회를 유지하는 효과를 지니며 셋째,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노동시장 개방 또한 피할 수 없으며 넷째, 일본의 경제적 번영을 아시아 각국과 공유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 및 기술 습득은 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국제 공헌에 해당하며 다섯째, 이질적인 문화와 접촉하는 경험은 일본 사회 자체의 국제 감각을 향상시키고 아시아 각국과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첫째,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이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게 돼 설비투자자와 기술혁신을 통한 합리화가 늦춰질 수 있으며 둘째,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돈은 대부분 개인 소비에 쓰이기 때문에 본국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국제 공헌으로 보기 어렵고 셋째,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노동시장을 양

14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일본 재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안천, 「일본의 이민정책과 일본 거주 외국인의 현황」, 64쪽; 설동훈,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비교」; 김태영, 「일본의 국제화와 동아시아의 노동시장: 일본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중심으로」 등을 참고.

분화해 차별을 구조화하고 이로 인한 외국인 배척 운동을 초래하여 사회 불안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며 넷째, 여러모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공정하게 착취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섯째, 일본 사회는 고도의 균질적 문화를 지니고 있어 다양한 문화, 언어, 종교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사회적 갈등과 비용 증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 문제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⁵

이외에도 최근 일본 사회 내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단순노동자의 유입을 금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한다면 그 범위와 체류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외국인의 사회 보장과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순 노동자 수용을 인정할 경우 가족 초청은 금지해야 하는지 허용해야 하는지, 불법 체류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외국인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JGSS 자료 분석을 통해 일본인들이 이러한 외국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JGSS 2000~2008년 자료 분석을 통해 외국인 증가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과 찬반 추이는 어떠한지,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인구통계학적, 사회·정치·경제적 특성 차이는 무엇인지,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와 인구통계학적·사회·정치·경제적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인과 접촉 빈도, 외국어 능력, 지역에 대한 애착 정도 등은 외국인 증가에 대한 견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5 安里和晃 編, 『労働鎖国ニッポンの崩壊: 人口減少社会の担い手はだれか』, 東京: ダイヤモンド社, 2011, 69~70쪽; 안천, 「일본의 이민정책과 일본 거주 외국인의 현황」, 65~66쪽.

3. 외국인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과 규정요인

우선 JGSS 2000~2008년 자료 분석을 통해 외국인 증가에 대한 일본인들의 찬반 추이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표 3>은 JGSS 2000~2008년 조사의 “귀하가 생활하는 지역에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와 반대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이 표에 의하면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과 반대하는 응답자 비율이 각각 30~40%, 50~60% 사이에서 변동하며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20년간 일본 사회 내에서 외국인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이 하나로 수렴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 도시규모, 생활정도, 세대 수입 정도, 정치의식, 학력 정도 등 인구통계학적, 사회·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라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각 변수별 찬반 추이를 정리한 <표 4>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표 4>에 의하면 성별, 거주지 도시규모에 따른 찬반 추이는 별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연령, 생활정도, 세대 수입 정도, 정치의식, 학력 정도에 따른 찬반 추이의 경우 몇몇 흥미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연령에 따른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외국인 증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유럽 사례에서 고로자이스키와 세미오노프(A. Gorodzeisky & M. Semyonov)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반이민 감정(anti-immigration sentiment)과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⁶

16 고령자 사이에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현상은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표 3〉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반 추이

(2000~2008)

	2000	2001	2002	2003	2005	2006	2008
찬성(%)	37.6	35.0	37.1	38.2	30.6	40.7	34.2
반대(%)	56.0	58.6	56.6	55.0	63.1	51.9	60.7
무회답(%)	6.4	6.4	6.3	6.8	6.3	7.4	5.0
총 응답자 수(N)	2,893	2,790	2,953	1,957	2,023	2,124	4,220

다음으로 응답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생활정도에 따른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2003년과 2005년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에서 생활정도가 상층에 속할수록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생활정도가 하층에 속할수록 외국인 증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나라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생활정도가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수용으로 인한 혜택(예를 들어 고용주의 경우 임금 하락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반면,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수용으로 인한 손해(예를 들어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⁷

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A. Gorodzeisky & M. Semyonov, "Terms of Exclusion: Public Views towards Admission and Allocation of Rights to Immigrants in European Countr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32 No. 1, 2009, pp. 401~423 참고.

17 〈표 4〉에 의하면 2003년과 2005년 조사의 경우 자신의 생활정도가 상층이라고 답한 응답자 집단에서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과 반대하는 비율은 각각 33.3% 대 66.7%와 18.2% 대 81.8%로 찬성보다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2003년과 2005년 조사에서 자신의 생활정도가 상층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가 각각 전체 유효응답자 1808명과 1882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6명, 11명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03년과 2005년 조사에서 상층이라고 답한 응답자 집단을 제외할 경우 생활정도가 상층에 속할수록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생활정도가 하층에 속할수록 외국인 증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은 JGSS 2000~2008년 조사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생활정도가 상층에 속할수록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일본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Thomas J. Espenshade & Charles Calhoun, "An Analysis of Public Opinion toward Undocumented Immigration", *Population*

〈표 4〉 변수별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반 추이 교차표

(2000~2008)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5		2006		2008	
변수*		찬성	반대												
성별	남성	41.2	58.8	37.7	62.3	39.3	60.7	40.5	59.5	33.6	66.4	42.2	57.8	37.3	62.7
	여성	39.4	60.6	37.2	62.8	39.9	60.1	41.4	58.6	32.0	68.0	45.7	54.3	34.9	65.1
연령대	20~29세	55.7	44.3	56.1	43.9	58.9	41.1	58.7	41.3	54.9	45.1	65.2	34.8	52.7	47.3
	30~39세	51.9	48.1	51.1	48.9	51.5	48.5	56.8	43.2	42.7	57.3	52.0	48.0	42.9	57.1
	40~49세	45.1	54.9	41.8	58.2	47.9	52.1	51.4	48.6	39.6	60.4	50.3	49.7	38.7	61.3
	50~59세	38.1	61.9	34.8	65.2	36.3	63.7	38.7	61.3	28.6	71.4	40.4	59.6	37.8	62.2
	60~69세	29.6	70.4	25.3	74.7	28.5	71.5	28.1	71.9	24.0	76.0	39.1	60.9	27.3	72.7
	70~79세	24.5	75.5	27.6	72.4	22.3	77.7	24.4	75.6	21.8	78.2	27.7	72.3	26.4	73.6
	80~89세	25.0	75.0	16.3	83.7	26.5	73.5	30.1	69.9	12.3	87.8	24.2	75.8	22.2	77.8
도시 규모	대도시	42.9	57.1	41.4	58.6	44.6	55.4	48.6	51.4	31.5	68.5	48.0	52.0	41.5	58.5
	기타 도시	40.2	59.8	36.6	63.4	37.9	62.1	39.3	60.7	33.7	66.3	43.0	57.0	36.0	64.0
	시 이외 지역	38.3	61.7	36.5	63.5	39.9	60.1	39.2	60.8	30.5	69.5	43.2	56.8	32.0	68.0
생활도	상	62.5	37.5	56.2	43.8	58.8	41.2	33.3	66.7	18.2	81.8	50.0	50.0	51.9	48.1
	중상	42.8	57.2	47.3	52.7	45.9	54.1	50.9	49.1	38.1	61.9	50.3	49.7	44.9	55.1
	중중	40.6	59.4	36.6	63.4	40.4	59.6	42.2	57.8	33.1	66.9	45.6	54.4	36.1	63.9
	중하	39.6	60.4	35.2	64.8	37.4	62.6	37.2	62.8	32.5	67.5	43.9	56.1	34.3	65.7
	하	35.3	64.7	36.5	63.5	34.3	65.7	36.2	63.8	28.5	71.5	30.6	69.4	31.9	68.1

〈표 4〉 변수별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반 추이 교차표 (계속)

(2000~2008)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5		2006		2008	
변수*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세대 수입	평균보다 상당히 적다	31.0	69.0	39.9	60.1	32.4	67.6	35.7	64.3	30.5	69.5	30.6	69.4	33.1	66.9
	평균보다 적다	39.8	60.2	33.7	66.3	35.4	64.6	37.9	62.1	30.4	69.6	41.7	58.3	33.1	66.9
	대략 평균이다	41.5	58.5	36.9	63.1	41.0	59.0	42.9	57.1	34.2	65.8	47.8	52.2	36.5	63.5
	평균보다 많다	43.4	56.6	47.9	52.1	50.9	49.1	48.5	51.5	37.9	62.1	45.3	54.7	43.1	56.9
	평균보다 상당히 많다	37.5	62.5	40.7	59.3	52.0	48.0	44.4	55.6	18.2	81.8	53.3	46.7	43.1	56.9
정치 의식	보수적	29.5	70.5	26.2	73.8	25.8	74.2	27.1	72.9	24.2	75.8	41.3	58.7	33.1	66.9
	약간 보수적	36.3	63.7	34.3	65.7	36.5	63.5	41.5	58.5	29.5	70.5	39.6	60.4	31.2	68.8
	중도	38.0	62.0	35.6	64.4	39.3	60.7	40.7	59.3	31.7	68.3	44.3	55.7	34.7	65.3
	약간 혁신적	53.0	47.0	49.4	50.6	50.1	49.9	46.8	53.2	42.9	57.1	50.9	49.1	45.5	54.5
	혁신적	55.2	44.8	53.7	46.3	52.3	47.7	55.6	44.4	44.2	55.8	50.0	50.0	47.8	52.2
최종 학교**	중학교	33.2	66.8	21.9	78.1	26.4	73.6	25.7	74.3	16.7	83.3	34.5	65.5	25.5	74.5
	고등학교	41.1	58.9	39.2	60.8	42.5	57.5	42.4	57.6	35.3	64.7	46.2	53.8	35.4	64.6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52.5	47.5	51.5	48.5	51.4	48.6	57.4	42.6	42.4	57.6	46.8	53.2	41.1	58.9
	대학교	66.7	33.3	50.0	50.0	60.0	40.0	60.9	39.1	53.3	46.7	53.5	46.5	44.4	55.6
	대학원	0.0	100.0	40.0	60.0	33.3	66.7	100.0	0.0	25.0	75.0	50.0	50.0	57.6	42.4

* 무응답자, 무회답자를 제외한 찬성과 반대 비율.

** 무응답자, 무회답자,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및 구제보통소학교(旧制尋常小学校), 구제고등소학교(旧制高等小学校), 구제중학교(旧制中学校)·고등여학교(高等女学校), 구제실업상업고(旧制実業·商業学校), 구제사범학교(旧制師範学校), 구제고교(旧制高校)·구제전문학교(旧制專門学校)·고등사범학교(高等師範学校), 구제대학(旧制大学), 구제대학원(旧制大学院)으로 응답한 응답자를 제외한 찬성과 반대 비율.

이러한 경향은 세대 수입 정도에 따른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반 추이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표 4>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응답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세대 수입 수준이 평균보다 높아질수록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반면, 평균보다 낮아질수록 외국인 증가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¹⁸

다음으로 응답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의식에 따른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조사에서 자신의 정치의식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외국인 증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¹⁹

마지막으로 응답자 본인이 최종적으로 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한 학력 정도에 따른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조사에서 대체로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외국인 증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하인물러와 히스콕스(J. Hainmueller & M. J. Hiscox)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이 이민자를 비롯한 외부인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기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때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 12 No. 3, 1993, pp. 189~224; R. M. Alvarez & T. L. Butterfield, "The Resurgence of Nativism in California? The Case of Proposition 187 and Illegal Immigration",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81 No. 1, 2000, pp. 167~179; Jeong, "Do National Feelings Influence Public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36(forthcoming), 2013 등을 참고.

18 이러한 경향은 자신의 세대 수입이 "평균보다 상당히 많다"라고 답한 응답자 집단의 경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매번 조사에서 자신의 세대 수입이 "평균보다 상당히 많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이 전체 유효 응답자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표본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경우 세대 수입이 평균보다 높을수록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반면, 평균보다 낮을수록 외국인 증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은 JGSS 2000~2008 대부분의 조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이민자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일반적 인식과 견해에 대해서는 L. M. McLaren, "Immigration and the New Politics of Inclusion and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The Effect of Elites and the EU on Individual-level Opinions Regarding European and non-European Immigrant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39 No. 1, 2001, pp. 81~108 참고.

〈표 5〉 영어 능력에 따른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반 추이 교차표

(2002, 2003, 2006)

연도		2002		2003		2006	
변수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영어 회화 능력	일상생활, 업무에서 충분히 가능	68.0	32.0	84.6	15.4	68.8	31.2
	일상생활, 업무에서 그럭저럭 가능	60.0	40.0	70.3	29.7	62.7	37.3
	길 묻거나 레스토랑에서 주문하는 정도	56.6	43.4	68.2	31.8	54.4	45.6
	인사하는 정도	48.1	51.9	48.0	52.0	49.5	50.5
	거의 회화 못함	31.3	68.7	31.0	69.0	36.3	63.7
영어 독해 능력	책이나 신문 술술 독해	65.4	34.6	85.7	14.3	76.9	23.1
	책이나 신문 그럭저럭 독해	63.6	36.4	66.7	33.3	56.3	43.7
	단문 정도 독해	50.8	49.2	61.0	39.0	56.8	43.2
	간단한 단어 정도 독해	43.4	56.6	44.6	55.4	44.4	55.6
	거의 독해 못함	30.3	69.7	29.1	70.9	34.7	65.3

문인 것으로 보인다.²⁰

한편 〈표 5〉는 JGSS 2002년, 2003년, 2006년 조사를 바탕으로 영어 능력에 따른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영어 회화 능력과 독해 능력이 우수할수록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그렇지 못할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단편적일 수는 있으나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외국인 증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 준다.

다음으로 〈표 6〉은 JGSS 2003년, 2006년, 2008년 조사를 바탕으로 생활하는 지역에서 외국인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 여부에 따른 외국인

20 J. Hainmueller & M. J. Hiscox, "Educated Preferences: Explain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1 No. 2, 2007, pp. 399~442의 연구는 교육이 이민자를 비롯한 외부인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기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6〉 대면기회에 따른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반 추이 교차표

(2003, 2006, 2008)

		2003		2006		2008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대면 기회	빈번하다	52.3	47.4	48.4	51.6	48.9	51.1
	때때로 대면	46.3	53.7	48.1	51.9	44.3	55.7
	거의 없음	41.6	58.4	44.8	55.2	38.8	61.2
	전혀 없음	26.0	74.0	36.5	63.5	28.6	71.4

증가에 대한 찬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외국인과의 대면할 기회가 많아질수록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적어질수록 외국인 증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외국인과의 접촉하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외국인 증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 준다.

다음으로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집단적 특성 차이에 대해 살펴보자. 〈표 7〉은 JGSS 2000~2008년 조사에서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응답자와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사회·정치·경제적 특성 및 영어 능력, 외국인 대면 기회 등 주요 변수별 평균값과 T-테스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²¹ 이 표에 의하면 외국

21 각 변수별 평균값 측정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했다. 첫째, 성별의 경우 남성에게 1의 값을 부여하고 여성에게 2의 값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측정했다. 따라서 평균값이 1.50이면 남자가 동수를, 1.50보다 작으면 남성 비율이 높다는 것을, 1.50보다 크면 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연령은 응답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측정했다. 셋째, 거주지 도시 규모는 대도시[2000~2002년 조사의 경우 삿포로(札幌) 시, 센다이(仙台) 시, 지바(千葉) 시, 도쿄도구부(東京都都区部), 요코하마(横浜) 시, 가와사키(川崎) 시, 나고야(名古屋) 시, 교토(京都) 시, 오사카(大阪) 시, 고베(神戸) 시, 히로시마(広島) 시, 기타큐슈(北九州) 시, 후쿠오카(福岡) 시; 2003년 조사의 경우 위 13개 대도시에 사이타마(埼玉) 시 추가; 2005년 조사의 경우 사이타마 시와 시즈오카(静岡) 시 추가; 2006년과 2008년 조사의 경우 2000년 기준 13개 대도시]에 1의 값을, 그 밖의 시에 2의 값을, 시가 아닌 지역에 3의 값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측정했다. 따라서 평균값이 낮을수록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넷째, 생활정도는 응답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계층이 “상, 중상, 중중, 중하, 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각각 1, 2, 3, 4, 5의 값을 부여하여 측정했다. 따라서 평균값이 낮을수록 상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세대 수입 수준은 응답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세대수입 수준이 “평균보다 상당히 적다”라고 답한 경우 1의 값

인 증가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균 연령, 생활정도, 세대 수입 정도, 정치의식, 학력 정도, 영어 회화 능력과 독해 능력, 외국인과의 대면 기회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특히 연령, 정치의식, 학력 정도 등의 변수에 있어서는 모든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 $p \leq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두 집단은 성별, 거주지 도시규모 등의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이 낮고, 주관적 계층의식을 기준으로 한 생활정도에 있어 상층에 속하며, 세대 수입 수준과 학력 정도가 높고, 정치의식이 혁신적이며, 영어 독해 능력과 회화 능력이 뛰어나며, 외국인과의 대면할 기회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반면 성별이나 거주지 도시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두 집단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JGSS 2000~2008년 조

을, “평균보다 적다”고 답한 경우 2의 값을, “대략 평균이다”라고 답한 경우 3의 값을, “평균보다 많다”라고 답한 경우 4의 값을, “평균보다 상당히 많다”라고 답한 경우 5의 값을 부여하여 측정했다. 따라서 평균값이 낮을수록 세대수입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정치의식은 응답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의식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1부터 가장 혁신적인 5까지 5개의 값을 부여하여 측정했다. 따라서 평균값이 낮을수록 보수적임을 의미한다. 일곱째, 영어 회화 능력은 응답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영어 회화 능력이 “일상생활이나 업무상 영어 회화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 1의 값을, “일상생활이나 업무상 영어 회화가 그럭저럭 가능한” 경우 2의 값을, “길을 묻거나 레스토랑에서 주문이 가능한 정도”일 경우 3의 값을, “인사말 정도 가능한” 경우 4의 값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 5의 값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측정했다. 따라서 평균값이 낮을수록 영어 회화 능력이 뛰어난을, 평균값이 높을수록 그렇지 못함을 의미한다. 여덟째, 영어 독해 능력은 응답자 자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영어 독해 능력이 “영어로 된 책이나 신문을 술술 읽을 수 있는” 경우 1의 값을, “영어로 된 책이나 신문을 그럭저럭 읽을 수 있는” 경우 2의 값을, “짧은 영어 문장 정도 읽을 수 있는” 경우 3의 값을, “간단한 영어 단어 정도 알고 있는” 경우 4의 값을, “거의 읽지 못하는” 경우 5의 값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측정했다. 따라서 평균값이 낮을수록 영어 독해 능력이 뛰어난을, 평균값이 높을수록 그렇지 못함을 의미한다. 아홉째, 외국인과의 대면 기회는 응답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외국인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빈번하다”고 답한 경우 1의 값을, “때때로 있다”고 답한 경우 2의 값을, “거의 없다”고 답한 경우 3의 값을, “전혀 없다”고 답한 경우 4의 값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측정했다. 따라서 평균값이 낮을수록 외국인과의 대면할 기회가 빈번함을 의미한다. 열째, 학력 정도는 응답자 본인이 최종적으로 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중학교인 경우 1의 값을, 고등학교인 경우 2의 값을, 단기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인 경우 3의 값을, 대학교인 경우 4의 값을, 대학원인 경우 5의 값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측정했다. 따라서 평균값이 높을수록 학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7> 외국인 증가 찬성자와 반대자 속성 및 특성 비교

(2000~2008)

변수		평균값						
		2000	2001	2002	2003	2005	2006	2008
성별	찬성자	1.53	1.53	1.53	1.56	1.53	1.53	1.51
	반대자	1.55	1.54	1.53	1.55	1.55	1.49	1.53
	T-값	-0.967	-0.246	0.331	0.401	-0.736	1.589	-1.593
	유의수준	0.334	0.805	0.741	0.689	0.462	0.112	0.111
연령	찬성자	46.35	46.62	46.77	47.32	46.77	47.98	48.63
	반대자	53.82	54.96	54.88	56.24	55.55	55.29	54.50
	T-값	-11.902	-12.606	-13.089	-11.378	-10.883	-9.908	-10.797
	유의수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거주지 도시 규모	찬성자	2.05	2.03	2.04	2.02	2.00	2.01	2.00
	반대자	2.09	2.07	2.08	2.09	2.01	2.05	2.08
	T-값	-1.596	-1.516	-1.368	-2.421	-0.296	-1.298	-3.942
	유의수준	0.111	0.130	0.172	0.016**	0.767	0.195	0.000***
생활 정도 (5분위)	찬성자	3.3066	3.2946	3.3051	3.3130	3.4061	3.3644	3.3391
	반대자	3.3657	3.3856	3.4052	3.4290	3.4628	3.4922	3.4477
	T-값	-1.943	-2.819	-3.248	-3.164	-1.438	-3.481	-4.015
	유의수준	0.052*	0.005***	0.001***	0.002***	0.151	0.001***	0.000***
세대 수입 (5분위)	찬성자	2.6496	2.6400	2.6779	2.6265	2.6114	2.7387	2.6967
	반대자	2.5568	2.5628	2.5012	2.5033	2.5447	2.5871	2.5868
	T-값	2.834	2.179	5.314	3.049	1.575	3.834	3.801
	유의수준	0.005***	0.029**	0.000***	0.002***	0.116	0.000***	0.000***
정치 의식 (5분위)	찬성자	3.0299	3.0387	3.0093	2.9906	3.0341	2.9568	3.0392
	반대자	2.7840	2.7958	2.7772	2.8164	2.8135	2.8383	2.8667
	T-값	6.800	6.496	6.531	4.026	4.776	2.903	5.811
	유의수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4***	0.000***
학력 정도	찬성자	2.2724	2.3628	2.3263	2.3837	2.3990	2.5864	2.6681
	반대자	2.0751	2.0662	2.0687	2.0547	2.1326	2.3872	2.3955
	T-값	6.609	9.524	8.512	8.890	7.279	4.048	7.687
	유의수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영어 회화 능력 (5분위)	찬성자	N.A.	N.A.	4.1954	4.1287	N.A.	4.1353	N.A.
	반대자	N.A.	N.A.	4.5401	4.5851	N.A.	4.4227	N.A.
	T-값	N.A.	N.A.	-10.287	-11.129	N.A.	-7.243	N.A.
	유의수준	N.A.	N.A.	0.000***	0.000***	N.A.	0.000***	N.A.
영어 독해 능력 (5분위)	찬성자	N.A.	N.A.	3.9716	3.9371	N.A.	3.8900	N.A.
	반대자	N.A.	N.A.	4.3251	4.4078	N.A.	4.1965	N.A.
	T-값	N.A.	N.A.	-9.992	-11.174	N.A.	-7.634	N.A.
	유의수준	N.A.	N.A.	0.000***	0.000***	N.A.	0.000***	N.A.
외국인 대면 기회 (4분위)	찬성자	N.A.	N.A.	N.A.	2.4685	N.A.	2.6493	2.4398
	반대자	N.A.	N.A.	N.A.	2.7955	N.A.	2.8221	2.6842
	T-값	N.A.	N.A.	N.A.	-7.256	N.A.	-3.908	-5.838
	유의수준	N.A.	N.A.	N.A.	0.000***	N.A.	0.000***	0.000***

* p<0.1; ** p<0.05; *** p<0.01

〈표 8〉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신부 증가에 대한 인식

(2008; N=2,160)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신부
대폭 증가하는 것이 좋다	2.0	1.8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이 좋다	16.7	12.6
현재 상태가 좋다	52.4	59.4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이 좋다	21.2	18.6
대폭 감소하는 것이 좋다	6.6	6.1
무회답	1.1	1.5
계 (%)	100.0	100.0

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고 생활수준과 세대 수입이 높으며 정치 의식이 혁신적이며 학력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나이가 많고 생활수준과 세대 수입이 낮으며 정치 의식이 보수적이며 학력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 외국인 증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 영어 능력이 우수하고 주변에서 외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외국인 증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하에서는 외국인 문제에 대해 새로운 설문이 추가된 2008년 JGSS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외국인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과 그 규정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표 8〉은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신부 증가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두 문제에 대해 증가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대폭 증가와 어느 정도 증가를 포함하여)은 18.7%와 14.4%이며, 감소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대폭 증가와 어느 정도 증가를 포함하여)은 27.8%와 24.7%이다. 반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표 3〉 결과와 더불어 일본인들이 아직까지는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신부 증가에 대해 부정

〈표 9〉 외국인 수용에 대한 인식

(2008; N=2,160)

출신지	중국	한국	대만	동남아	유럽	북미
동료로 수용할 수 있다 (%)	62.1	66.3	68.5	65.4	70.2	70.7
동료로 수용할 수 없다 (%)	32.7	28.3	25.9	28.7	24.1	23.7
무회답 (%)	5.2	5.4	5.6	6.0	5.7	5.6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근지역 거주자로 수용할 수 있다 (%)	60.3	65.4	67.1	63.3	70.7	71.4
인근지역 거주자로 수용할 수 없다 (%)	34.7	29.7	27.8	31.3	24.1	23.6
무회답 (%)	5.0	5.0	5.1	5.3	5.2	5.0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결혼을 통해 친족으로 수용할 수 있다 (%)	53.1	56.4	58.4	54.6	64.0	64.8
결혼을 통해 친족으로 수용할 수 없다 (%)	41.3	58.4	36.0	39.6	30.5	29.7
무회답 (%)	5.6	5.6	5.6	5.8	5.6	5.5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적 견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그러나 동시에 〈표 9〉는 일상생활에서 외국인을 직장 동료로, 인근지역 거주자로, 또는 결혼을 통해 친족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 일본인들이 어느 정도 개방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표에 의하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중국, 한국, 대만, 동남아, 유럽, 북미 출신 외국인을 직장 동료로, 인근지역 거주자로, 또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하지만) 결혼을 통해 친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인 다수가 아직 외국인 증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외국인들을 직장 동료나 인근지역 거주자로, 또는 결혼을 통해 친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 ‘일본인론(日本人論)’²² 연구들이 일본인 또는 일본

22 ‘일본문화론,’ ‘일본사회론,’ 또는 ‘일본론’ 등으로 불리는 ‘일본인론’은 일본에서 특히 1970년대와

문화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인종주의(exclusory racism)’가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출신 외국인들에 비해 유럽 또는 북미 지역 출신 외국인들에 대한 선호가 더 높다는 사실은 요시노(Kosaku Yoshino) 등이 지적한 백인들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의 ‘인종주의적 사고(racist thinking)’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드러내준다.²³

다음으로 <표 10>은 2008년 JGSS 조사에서 수정된 영어 능력에 대한 설문과 새로 추가된 외국 교육 경험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이들 변수에 따라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N=2160명 가운데 무회답자 제외하고) 정리한 교차표다. 이 표에 의하면 영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그렇지 못할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편적일 수는 있으나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외국인 증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 준다. <표 10>은 또한 외국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과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국인 증가에 찬성 비율이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반대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표 6> 결과와 더불어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외국인 증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 준다.

다음으로 <표 11>은 2008년 JGSS 조사에 새로 추가된 지역에 대한 애착 정도에 따라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

1980년대 크게 유행한 담론으로 일본 사례를 서구 사례, 주로 미국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일본 국민, 일본 문화, 또는 일본 사회의 독특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 가운데 Changsoo Lee & George De Vos eds., *Koreans in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George De Vos & Hiroshi Wagatsuma, "Cultural Identity and Minority Status in Japan", in L. Romanucci-Ross and De Vos eds., *Ethnic Identity: Creation, Conflict, and Accommodation*, Walnut Creek: Alta Mira, 1995 등의 연구는 ‘배타적 인종주의’를 일본 문화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며 외국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차별 또는 배제가 이러한 일본 문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²³ Kosaku Yoshino, *Cultural Nationalism in Contemporary Japan*. London: Routledge, 1992.

〈표 10〉 영어 능력과 외국 교육 경험에 따른 외국인 증가 찬반 추이 교차표

(2008)

변수		찬성(%)	반대(%)
영자 신문의 간단한 기사 독해 능력	매우 잘함	70.0	30.0
	잘함	76.0	24.0
	조금 할 수 있음	54.4	45.6
	별로 못함	48.0	52.0
	거의/전혀 못함	32.9	67.1
	전체*	40.2	59.8
영어로 접담하는 능력	매우 잘함	80.0	20.0
	잘함	80.6	19.4
	조금 할 수 있음	63.0	37.0
	별로 못함	46.6	53.4
	거의/전혀 못함	33.8	66.2
	전체*	40.2	59.8
영어로 편지 쓰는 능력	매우 잘함	80.0	20.0
	잘함	71.0	29.0
	조금 할 수 있음	62.3	37.7
	별로 못함	51.6	48.4
	거의/전혀 못함	34.5	65.5
	전체*	40.2	59.8
외국에서 1년 이상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닌 경험	외국 대학·대학원 졸업	50.0	50.0
	다닌긴 했으나 졸업은 아님	38.5	61.5
	다닌 적 없음	40.2	59.8
	전체*	40.3	59.7
외국에서 5일 이상 교육·연수 경험	있음	66.7	33.3
	없음	38.8	61.2
	전체*	40.3	59.7

* 2008년 JGSS 조사 B표 2,160명 응답자 가운데 각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은 무회답자 제외.

는지(N=2160명 가운데 무회답자 제외하고) 정리한 교차표다. 이 표에 의하면 흥미롭게도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 또는 마을에 대한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동아시아에 대한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외국인 증가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이 두 지역에 대한 애착 정

〈표 11〉 지역에 대한 애착 정도에 따른 외국인 증가 찬반 추이 교차표

(2008)

변수		찬성(%)	반대(%)
거주 도시 또는 마을에 대한 애착 정도	상당히 애착	42.4	57.6
	어느 정도 애착	39.8	60.2
	별로 애착하지 않음	37.1	62.9
	전혀 애착하지 않음	33.3	66.7
	전체*	40.2	59.8
일본에 대한 애착 정도	상당히 애착	37.8	62.2
	어느 정도 애착	42.4	57.6
	별로 애착하지 않음	53.8	46.2
	전혀 애착하지 않음	46.2	53.8
	전체*	40.3	59.7
동아시아에 대한 애착 정도	상당히 애착	50.0	50.0
	어느 정도 애착	47.1	52.9
	별로 애착하지 않음	42.0	58.0
	전혀 애착하지 않음	29.2	70.8
	전체*	40.5	59.5

* 2008년 JGSS 조사 B표 2,160명 응답자 가운데 각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은 무회답자 제외.

도가 낮을수록 외국인 증가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본에 대한 애착 정도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애착 정도가 낮을수록 외국인 증가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외국인 증가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⁴

마지막으로 〈표 12〉는 위에서 살펴본 변수들 가운데 주요 변수들이 외국인 증가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을 규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8년 JGSS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다중 로

24 일본에 대해 “전혀 애착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찬성과 반대 응답자가 각각 전체 응답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6명, 7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12〉 외국인 증가 찬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N=1,963)****

변수		B	S.E.	Wald	Sig.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0.0351	0.0973	0.1299	0.7185
	연령	-0.0174	0.0031	31.5971	0.0000***
사회·정치·경제적 변수	거주지 도시규모	-0.1036	0.0762	1.8476	0.1741
	정치의식	0.2186	0.0556	15.4581	0.0001***
	생활정도	-0.1177	0.0620	3.6030	0.0577*
지역 애착 변수	거주지에 대한 애착	-0.2200	0.0820	7.2051	0.0073***
	일본에 대한 애착	0.2011	0.0917	4.8025	0.0284**
	동아시아에 대한 애착	-0.2824	0.0606	21.7179	0.0000***
국제화 변수	외국인 대면 기회	-0.1405	0.0537	6.8408	0.0089***
	영어 회화 능력	-0.3739	0.0691	29.2933	0.0000***
상수		3.3795	0.4749	50.6335	0.0000***
-2 Log likelihood		2458.372			
Chi-Square		193.146			
Cox & Snell R Square		0.094			
Nagelkerke R Square		0.126			

* p<0.1; ** p<0.05; *** p<0.01 **** 2008년 JGSS 조사 B표 응답자 2,160명 가운데 각각의 질문에 대해 하나라도 답하지 않은 무회답자 모두 제외.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종속변수인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반대하는 경우 0의 값을 부여했으며,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 거주지 도시규모, 정치의식, 생활정도와 같은 사회·정치·경제적 변수, 지역(현재 거주하는 지역, 일본, 동아시아)에 대한 애착 변수, 외국인 대면 기회와 영어 회화 능력 등과 같은 국제화 변수를 채택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운데 연령 변수는 $p < 0.01$ 수준에서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성별은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정치·경제적 변수 가운데서도 정치의식 변수는 $p < 0.01$ 수준

에서, 그리고 생활정도는 $p < 0.1$ 수준에서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거주지 도시규모와 생활정도는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애착 변수의 경우는 현재 거주지에 대한 애착과 동아시아에 대한 애착 변수는 $p < 0.01$ 수준에서, 그리고 일본에 대한 애착 변수는 $p < 0.05$ 수준에서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대면 기회, 영어 회화 능력 변수 등과 같은 국제화 변수들도 $p < 0.01$ 수준에서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은지 낮은지, 정치의식이 보수적인지 혁신적인지, 생활정도가 상층인지 하층인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일본, 동아시아에 대한 애착은 어느 정도인지, 일상생활에서 외국인을 대면할 기회는 많은지 적은지, 영어 회화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부가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설명하는 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통계적으로 연령이 낮고 정치의식이 혁신적이며 생활정도가 상층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동아시아에 대한 애착심이 높고 일상생활에서 외국인을 자주 대면하며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반면, 연령이 높고 정치의식이 보수적이며 생활정도가 하층이며 일본에 대한 애착심이 높고 일상생활에서 외국인을 자주 대면하지 못하며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사람들이 외국인 증가에 반대함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외국인 문제에 관한 2008년 JGSS 조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일본인들은 우선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신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이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에서 외국인을 직장 동료로, 인근지역 거주자로, 또는 결혼을 통해 친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 능력이 우수하거나 외국인 대면 접촉 기회가 많을수록, 그리고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동아시아에 대한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영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거나 외국인 대면 접촉 기회가 적을수록, 그리고 일본에 대한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외국인 증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²⁵ 마지막으로 외국인 증가 찬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연령, 정치의식, 생활정도, 지역에 대한 애착 정도, 외국인 대면 기회와 영어 회화 능력 등의 변수가 외국인 증가 찬반 여부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성별, 거주지 도시 규모 등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4. 결론

지금까지 JGSS 2000~2008년 자료 분석을 통해 외국인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특히 외국인 증가에 대한 일본인들의 찬반 추이는 어떠한지,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인구통계학적, 사회·정치·경제적 특성 차이는 무엇인지,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와 인구통계학적·사회·정치·경제적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인과의 접촉 빈도, 외국어 능력, 지역에 대한 애

25 지역에 대한 애착 정도와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성 비율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반적 인식으로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외국인 증가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반대의 결과가 나온 점은 추후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2010년, 2012년 JGSS 자료 공개가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착 정도 등은 외국인 증가에 대한 견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외국인 증가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아직까지 부정적 견해가 우세한 편이며, 구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신부 문제에 대해서도 그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이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GSS 2008년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외국인을 직장 동료로, 인근지역 거주자로, 또는 결혼을 통해 친족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방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사회·정치·경제적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나이가 젊고 생활수준과 세대 수입이 높으며 정치의식이 혁신적이며 학력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나이가 많고 생활수준과 세대 수입이 낮으며 정치의식이 보수적이며 학력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 외국인 증가에 반대하는 비율은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영어 능력이 우수하고 주변에서 외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으며 외국에서 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동아시아에 대한 애착 정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일본에 대한 애착 정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외국인 증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증가 찬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연령, 정치의식, 생활정도, 지역에 대한 애착 정도, 외국인 대면 기회와 영어 회화 능력 등의 변수가 외국인 증가 찬반 여부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성별, 거주지 도시 규모 등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분석 내용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 사회가 외국인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을 좀 더 포용적(inclusive)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고민하는데 몇 가지 함의를 준다.

첫째, 영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단편적일 수도 있으나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외국인 증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을 좀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일본인들이 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둘째, 외국인과 일상생활에서 대면할 기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외국인 증가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외국인 증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을 좀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일본인들이 외국인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셋째, 동아시아에 대한 애착 정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외국인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외국인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을 좀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 등을 통해 동아시아에 대한 애착을 증진시키는 것이, 즉 한국,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요컨대 외국인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을 좀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일본인들과 외국인들이 의사소통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과 교육 등을 통해 동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애착심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

회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즉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 등을 통해 동아시아에 대한 한국인들의 애착심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업원을 대상으로 고용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장기고용시스템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며, 내부 노동시장을 발달시키고 있던 기업은 결혼을 이유로 조기퇴직의 우려가 있는 여성을 미리 배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 때문에 이 제도는 경제합리성을 가지며, 법적인 근거를 잃은 후에도 직장의 불문율로서 잔존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기업은 일관하여 가정책임을 지지 않고 생산노동에 전념할 수 있는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왔다. 일본의 고용관행에 의해 규정된 젠더규범은 강고하게 계속 작용할 것이다.

주제어: 여성노동, 결혼퇴직, 내부 노동시장, 비정규 고용, 젠더

일본의 산탄지역 진흥정책: 산업구조 조정정책에서 지역개발정책으로 | 정진성

투고일자: 2012. 8. 17 | 심사완료일자: 2012. 8. 22 | 게재확정일자: 2013. 2. 6

석탄산업의 사양화가 산탄지역의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61년에서 1962년에 걸쳐 산탄지역 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산탄지역 진흥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산탄지역의 산업구조 조정, 즉 석탄산업에서 공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산탄지역의 산업기반 조성, 산탄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산탄지역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그 중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1971년 12월에 책정된 제3차 산탄지역 진흥계획에 이르러 산탄지역 진흥정책은 산업구조 조정정책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사회·문화 부문에 걸친 종합적 정책인 지역개발정책으로 그 성격이 변화해 갔다.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산탄지역 진흥정책과 전국종합개발계획과의 연계, 산탄지역 생활환경 정비의 중시, 공업만이 아닌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적지적성 산업의 육성과 같은 제3차 진흥계획에 새로이 나타난 항목들이었다.

주제어: 사양산업, 산탄지역, 산탄지역 진흥정책, 산업구조 조정정책, 지역개발정책

외국인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과 규정요인 분석: 2000~2008년 일본판 총합사회조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김범수

투고일자: 2012. 10. 17 | 심사완료일자: 2012. 12. 6 | 게재확정일자: 2013. 2. 6

이 연구는 오사카상업대학 비교지역연구소가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일본 거주 만 20세 이상 89세 이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일본판 총합사회조사(日本版總合社會調査; JGSS: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자료 분석을 통해 외국인 증가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JGSS 2000~2008년 자료 분석을 통해 연령, 정치의식, 생활정도, 지역에 대한 애착 정도, 외국인 대면 기회와 영어 회화 능력 등의 변수가 외국인 증가 찬반 여부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최근 일본 사회에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더불어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일본, 외국인 문제, 일본판 총합사회조사, 다문화 사회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st-marriage retirement was implemented also because the labor market worsened in terms of job opportunity during Japan's rapid economic growth period. The institutionalized practice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circumstances of the post-WWII times that sought the formation of a long-term employment system, in order to secure work for full-time. For companies that were equipped with a developing internal labor market, it was 'necessary' to exclude in advance those women who were deemed likely to retire early upon marriage. Accordingly, this system maintained its economic logic and persisted as an unwritten code in the workplace, notwithstanding the disappearance of its legal support. Considering historical records, Japanese companies have consistently sought workers who could devote themselves exclusively to the production labor, without any consideration given to their familial responsibilities. It can be said that ideas of gender distinctions inherent in Japan's employment practices continue to persist in effect today in ways unseen.

• **Keywords:** Female labor, post-marriage retirement, internal labor market, non-regular employment, gender

The Revitalization Policies for Coal-Mining Areas in Japan during the 1960s

| CHUNG Jin Sung

During 1961-1962, the Japanese government introduced the revitalization policies for coal-mining areas, as the decline of the coal-mining industry resulted in the population decrease and impoverishment of the areas. Initially, the revitalization policies were established in order to adjust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coal-mining areas—for instance, to change the dominant industry of the areas from a coal-mining industry to a manufacturing one. Some of the important tasks included tasks such as building infrastructure and inviting manufacturing companies and offering financial aids to the municipalities of the areas. Howev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third revitalization plan in December 1971, the revitalization policies changed in nature from that of initial structural adjustment policies to that of area development policies, made to resolve variou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roblems. This transition is visible in: certain new points that are emphasized in the third plan; the connection between the revitalization policies and the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s; the betterment of the inhabitants' living conditions; the fostering of various business enterprises appropriate to the areas and of manufacturing.

Keywords: declining industry, coal-mining areas, the revitalization policy for coal-mining areas, structural adjustment policy, area development policy

Japanese Views on the Increase of Foreigner Population in Japan: An Analysis of the 2000~2008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JGSS)

| KIM Bum Soo

By analyzing the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s (JGSS), planned and conducted by the

JGSS Research Center at Osaka University of Commerce in collaboration with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Tokyo, this article examines the general Japanese view on the increase of foreigner population an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formation of this view. Specifically, by analyzing the 2000~2008 JGSS data,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factors such as age, political orientation, household income level, the degree of emotional attachment to his/her town of residence, openness of his/her living area to foreigners (measured in terms of the opportunity rate to encounter foreigners in the area), level of English oral communication etc.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as they affect the views of the surveyees on the increase of foreigner population. This article aims at understanding the foreigner problem in Japan, as well as at finding a general policy solution that will help achieve ethnic integra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of Japan.

• **Keywords:** Japan, the foreigner problem,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JGSS), multicultural society